# 광주출신 中 음악가 정율성 일대기 영화로

## 한류스타 캐스팅…한국서 3분의 1 촬영

##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 中과 합작…내년 개봉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광주 출신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1914~1976·사진)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진다.

광주 남구 양림동 출신인 정율성 선생은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과 '연안송' 등 360여곡의 노래를 창작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31일 북경아큐브커뮤니케이션과 정율성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공동 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는 섬서성 서안시의 일로양광문화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하며 중국의 영화전문학교인 베이징 전영학원이 제작 지원을 맡는다.

이번 영화 제작은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베이징 전영학원 등이 체결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중국 젊은 감독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물색 중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억원. 일로양광문화엔터테인먼트가 8억원을 투자했으며 정율성 선생이 초등학교를 다닌 화순군이 2억원을 내놓았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투자금을 더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작비가 2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주인공 정율성 역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 한류 스타를 캐스팅 할 계획이다.

이번 영화의 주 타깃은 중국 시장으로 중국에서 3분의 2, 한국에서 3분의 1정도 촬영하게 된다. 시나리오와 감독, 배우가 결정되면 이르면 올 가을에 크랭크인해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광주국제영화제 기간인 8월28일~9월1일 영화 제작과 관련한 중국 측 인사들도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엄기명 북경 아큐브커뮤니케이션 대표, 단붕 일로양광문화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중국 관계자들은 영화 제작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29일 오후 전남대에서 '한-중 영화포럼'을 열어 '한·중 영화 공동제작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정율성 탄생 100년을 맞아 오는 8월 7일 중국 베이징 북경세기극원에서 '한·중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 KTX, 주중 할인 폐지 요금 인상 논란

## 코레일, 할인제도 개편…정기고객 혜택은 강화

코레일이 이달 안에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 등을 폐지하기로 해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

코레일은 현재 시행 중인 할인제도 중 이용 실적이 많은 정기 고객 등에 대한 할인혜택은 강화하고 도입목적인 수요 확대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할인은 폐지·축소하는 방향으로 요금할인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하고 KTX 역방향 및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폐지키로 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수요 확대를 위해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월~목요일에 KTX는 7%,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4.5%의 요금을 각각 할인해왔다. 또 KTX 역방향과 출입구석은 5%, 철도이용계약수송은 10%를 할인했다.

또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신경주역·울산역 우회에 따라 개통 초기 한시적으로 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인상분을 특별할인해 왔던 것도 다른 노선과 형평을 맞춰 정상운임으로 환원한다.

이 같은 요금할인제도 폐지와 조정으로 해당 이용객들은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코레일은 대신 출·퇴근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KTX와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할인율은 현행 50%(청소년 60%)에서 추가로 최대 7%를 할인한다.

또 승차율이 낮은 열차 위주로 제공되는 KTX 파격가 할인제도도 이용기간이 비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좌석 규모를 현재보다 10% 더 늘리고 올해 추석부터 역귀성 열차는 최대 70%까지 할인키로 했다.

정부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노약자,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할인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취임 한달 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지사

# 시민시장·막걸리 지사…탈 권위·소통 행보

■윤장현 시장

**시장 의전·조직내 회의 대폭 축소**

**헬기 추락 사고 수습…위기관리 돋보여**

**조직개편안 시의회 부결 '해결 과제'**

■이낙연 지사

**도민과의 소통 강화 위해 민원실 개편**

**여야 초월 예산 확보 위한 전방위 활동**

**조직정비·대의회 관계 연착륙…평가 긍정적**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한달을 맞았다. 시·도지사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민선 6기를 이끌 새로운 행정철학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첫 시민시장 윤장현=시민과 소통, 시민의 시정 참여를 기치로 내건 윤장현 시장은 직원·시민 등과의 접촉에 정성을 쏟고 있다.

윤 시장은 일단 자신과 함께 일할 직원들의 생각과 시민이 바라는 것을 직접 들어야만 정책 실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는 '시장 위에 시민이 있다'며 탈권위적 행보를 통해 시장 의전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윤 시장은 또 공직사회 내에 '신바람 나는 일할 분위기 조성'에도 집중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했다. 조직 내 회의도 대폭 축소했다. 대신 실·국·과·자치구간 토론문화를 유도했다. 짬짬이 시간을 내 정부와 국회를 뛰어다니며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서는 일도 잊지 않았다.

취임 후 한달동안 강원도 소속 소방헬기가 광주도심에 추락하고, 아파트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이 집단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무리 없이 수습해 내는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줬다. 강원도 관계자들은 1일 광주시의 정성어린 수습에 감사하다며 특산물인 찰옥수수를 삶아 광주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시장의 '사람중심 리더십'이 벌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안이 정무능력 부재 등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은 해결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윤 시장의 시민중심 철학을 악용한 악성민원인의 막무가내식 시청방문이 급증했다는 점도 해결할 부분이다. 일부 부서의 대시민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막걸리지사 이낙연=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한달동안 도민 소통과 광주시와의 상생, 내년도 국비확보, 현안 점검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격상하고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도민소통실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도정 운영의 틀을 다잡았다.

'전 직원과 한번씩은 막걸리를 마신다'고 공언할 정도로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도 파고들었다. 광주시와의 상생발전에도 적극 나서 시도발전연구원의 통합 모색과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냈다.

4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앞세워 국회 예결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초월한 전방위적 예산 확보활동도 벌였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지속 여부 및 경기장 활용 방안, 솔라시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보완, 사파리아일랜드의 경제성 검토 등 미진했던 도정 현안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호' 취임 1개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조직정비나 대의회 관계에 있어 연착륙했고 최근 단행한 고위직 첫 인사도 도청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낙연호의 색깔을 낼만한 굵직한 프로젝트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도로명주소 쓰면 우편요금 할인

## 우정사업본부, 오늘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다량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을 할인해준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요금별납우편물 2000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1000통 이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6월 말 기준)로 저조한 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병수 우편사업단장은 "도로명주소가 활성화하려면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기업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할인 정책이 집배원의 애로 해소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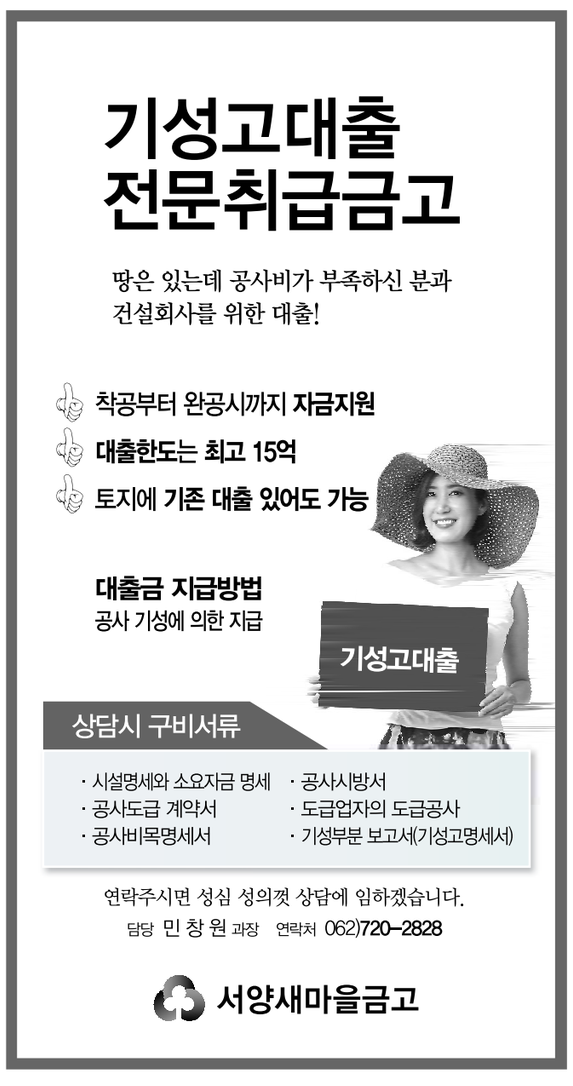
# 주민번호 수집시 3천만원 과태료

## 안행부, 내년부터 개인정보유출 처벌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보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